

박상천 대반격

“대통합과 8인은 탈당 선동 중단하라” 광주 기자회견... 박시장·박지사 맹비난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20일 탈당을 공언하며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당내 대통합과 8인을 겨냥 “제2의 분당기도이자 통합민주당 파괴공작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대표가 대통합 행보에 나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당내 대통합과 대립이 더욱 격화, 분당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분업인 시·도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대통합에만 열중, 민주당을 조개 열린우리당에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거나 그 이전에도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중앙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국회위원에 나오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통합과 8인은 당 지역위원장들에게도 탈당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중도개혁 통합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통합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도개혁통합의 성사를 위해 당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잡탕식·무조건 대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합민주당이 소통합에 안주하려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진짜 억울한 일”이라며 “통합민주당은 당직 임명을 미루면서까지 대선 승리와 정치발전을 위한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이날 발언은 통합민주당이 지역민들에게 대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비쳐지는 것과 호남 여론이 당대 당 통합으로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대표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불문하고 반 한나라당 세력 모두를 끌어모으다 보면 극심한 노선갈등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고, 실제한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을 통째로 받을 경우 ‘도로 열린우리당’이 왜 대선 승리가 어렵다”며 열린우리당과의 당대 당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 호남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전주 코아비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범여권의 대통합 행보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단회에서 “정치권의 진령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탈당 여부도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북의 공동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대통합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

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대통합에 미온적인 박상천 대표 측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여파가 주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20일 낮 광주 삼우지구 센트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대통합과 8인의 탈당 선동에 대해 맹비난하며 “중도대통합”을 위한 당원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와대·국회도 행정복합도시로” 盧대통령 행정도시 기공식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성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공식에 참석, 축하 연설을 통해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잡는 것이 순리”라며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도 마찬가지로”라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제3지대 신당’ 안갯속

범여-창조연대 지분다툼 일정 치질
김한길, 우리당 해체론 사실상 철회

범여권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이 지분협상을 둘러싼 내부 이견 등으로 인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과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지지조직인 선진평화연대, 시민사회그룹인 ‘미래창조연대’(이하 창조연대) 등이 지난 19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지러 했던 4자 회동이 창조연대측의 거부로 연기된 데 이어 20일 회동 시도 역시 무산됐다.

우리당 탈당그룹이 전날 범여권 정과 대표 3명과 시민사회그룹 2명 등 5인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창조연대측이 수용하면 범여 정차권과 창조연대측 중앙위원을 1:1로 구성할 수 있다며 수정 제안을 내놨으나, 창조연대측은 “계파별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창조연대 정대화 대변인은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는 우리당 탈당그룹이 오는 24일 창준위 발족, 내달 5일 중앙당 창당 등의 일정을 들어 조속한 합류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시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창당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박상천 대표 등 통합민주당 분류가 “잡탕식 대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상태에서 시민사회그룹까지 합류를 머뭇거리고 있어 자칫 제3지대 신당이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일부 탈당의원들만의 테이블로 축소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6일 탈당을 공언한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8인 내부에서도 탈당 시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도통합 민주당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제3지대 세세력과의 논의결과에 따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3지대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당이 당 차원에서 통째로 범여권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간 우리당의 해체를 요구해온 통합민주당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천 공동대표도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당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감사원서 도곡동땅 이명박 소유 확인”

김동철 의원 주장... 추측 “무혐의된 사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도곡동땅’ 차명 보유 논란이 1998년 당시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문답사 공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의 김동철 의원은 20일 이 전 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98년 포항제철 경영관리실때 특별감사문

답서를 열람한 결과, 문제의 도곡동 땅은 이후 소유라는 당시 김만제 포철 회장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의혹을 거듭 부인한 반면 박근혜 전 대표측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열람

한 뒤 공개한 98년 감사원의 김만제 전 회장과 문답서에 따르면 “도곡동 땅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는 감사원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모름”이라고 답했다. 김광준(포철) 상무가 위 부지를 매입했다고 저에게 보고하면서 알았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핵심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문답서에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은 이날 “감사원에서 도곡동 땅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고 확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설

광양 후관 공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된다

포스코가 연간 200만 생선규모의 후관공장을 광양제철소 인근에 신설키로 했다. 포스코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광양제철소 1 미니밀 공장 인근 여유부지에 후관공장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후관공장 신설은 국내 후관수요에 대응하고 2009년 광양4고로 능력 확장공사 이후 늘어나는 쇠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후관공장 신설로 광양항 활성화와 조선, 중공업, 자동차 등 후관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 공장 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무려 1조7천9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신설되는 후관공장에 필요한 슬래브를 공급하기 위해 광양에 200만톤의 제강공장이 추가로 건설된다. 후관공장 건설에 따른 직접 투자비만도 엄청난 셈이다.

후관공장 신설지로 광양을 선택한 이유는 여유 공장부지가 많은데다 현대삼

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이 남해안에 밀집해 있고 광양항 등 물류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조선산업을 비롯한 물류산업과 광양항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광양제철소는 대규모 후관공장 신설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제철소로 우뚝 서게 됐다. 규모가 커진 만큼 고용창출은 물론 관련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광양시 등 지자체와 지역경제는 이번 광양 후관공장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고급 후관재 수요가 많은 조선, 중공업 고객사들의 유치를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포스코가 후관공장을 건설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학벌 만능주의가 빛은 ‘학력 위조’ 사태

가짜 학위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서 면직된데 이어 강단에서 추방됐다. 동국대는 20일 자체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씨를 조교수에서 파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속속 드러나는 신씨의 ‘사기극’이 놀라움 따름이다.

신씨의 가짜 학위 파문은 유명인사들의 ‘학력위조 커밍아웃’으로 이어지고 있다. KBS라디오의 영어 강의 프로그램을 7년간 진행해온 학원 강사 출신 신정아씨는 영국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으나 고졸로 밝혀졌다.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도 신간화회를 통해 학력이 고졸인데도 대학 중퇴라고 속였던 사실을 고백했다.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해 출세하려는 풍조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정기관이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실력으로 가짜학력을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더 노력했다거나 거짓말이 항상 마음의 짐이 됐다는 고백 등으로 학력위조를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 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학력위조 사태는 사회에 만연된 ‘학벌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이지영씨나 이현세씨 등이 처음부터 학력을 고졸이라 밝혔다면 현재의 명성을 얻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력과 자질 대신 학력과 학벌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짜 학위가 통하는 학위관리 시스템도 보강해야 한다. 가짜 학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신정아씨의 사례에서 보듯 검증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학 등 채용기관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에 중도조차 않고 있다. 학위를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1천여명 신규 채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올 하반기에 1천여명을 새로 뽑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 상반기에 1천116명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는 1천명~1천100명 정도를 총원해 각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인적성 검사와 한자시험,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입과 경력직을 상반기와 비슷한 비율로 채용하며 특히 면접전형을 강화해 각 계열사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낸다는 복안이다.

올 상반기의 경우 대졸 신입 322명, 승무원 등 계열사 자체 채용 722명, 경력직 공

채 72명 등 총 1천116명을 뽑았으며 대졸 신입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섰다.

이처럼 금호아시아나가 올해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는 대우건설 인수도 덩치 커진데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등이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올 하반기는 상반기와 비슷한 1천여명을 뽑으며 면접을 강화하는게 특징”이라면서 “원서를 여러 회사에 중복 지원하기보다는 금호아시아나나라는 회사에 집중해 역사와 사업 특성 등을 면밀히 아는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5·18 발포 명령자 확인 못한 듯

軍과거사위 24일 진상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24일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12·12 군사반란과 5·17 전국 비상계엄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 등의 진상을 군 내부 문서 등을 통해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

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난 이들 사건에 대한 군 내부 기록과 증거자료를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 때 발포를 명령한 인물은 군 내부 어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군 내부 기록에 증거자료가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물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물증확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의만평

- 김중두



우리, 1% 갖고 그 나라를 치는 거야?!

李-朴 퇴로없는 진검승부 돌입

한나라당 오늘부터 공식 선거전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공식선거전이 21일 시작돼 열린 30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간다.

지난 2002년 경선에서는 지역을 돌며 순차투표를 한 것과 달리 올해는 내달 19일 전국적으로 ‘원샷투표’를 하기 때문에 각 후보진영은 막판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승마하는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경선의 최대부수령인 검증문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자평하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는 분위기이다.

캠프측은 당 안팎의 네거티브에 대한 ‘무대응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고 남은 기간에도 정책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원칙적으로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전 대표측은 정책토론회와 검증청문회로 이어진 ‘1차 검증’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2차

운드 검증’에 나설 태세다. 특히 캠프에서 나서지 않아도 이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검찰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지난 4차례의 정책토론회와는 달리 13차례의 합동연설회는 정해진 주제가 없는 만큼 후보들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합동유세다. 오는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전남(24일) ▲부산(26일) ▲울산(27일) ▲인천(30일) ▲강원(8월 1일) ▲충북(3일) ▲경남(6일) ▲대전·충남(8일) ▲전북(10일) ▲경기(13일) ▲대구·경북(14일)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마무리 된다.

당은 이어 내달 19일 경선투표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튿날인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